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성기영 책임연구위원
sungk@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3국의 인식
- III.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요 쟁점과 과제
- IV. 정책적 시사점

국문 초록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개최되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과거 정부에서 개최되었던 3국 정상회담에 비해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훈련 공개와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사이에는 3국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기대이익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북핵 억제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 △가치 연대 등 외교 지평 확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성 제고 등에 3국협력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내 동맹 재구성 △대중국 견제 블록 형성 등을 중시하고, 일본은 한미일 3국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보 이외에도 △대중 견제와 △방위력 증강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발 위협의 증대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확산에 따라 기존의 공통인식에 착안하여 협력의 요소들을 극대화 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우선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보하고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한미일 협력의 위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에 대해 각국의 견해차를 조율하고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국협력의 지역 내 신뢰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핵심어: 한미일 안보협력, 북핵 억제,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 위협인식

목차

I. 문제 제기

II.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3국의 인식

1. 한미일 3국 인식의 공통점: 정상회담 평가
2. 한미일 3국 인식의 차이점: 정책 우선순위와 기대이익
 - 가. 한국의 정책 우선순위
 - 나.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
 - 다. 일본의 정책 우선순위

III.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2.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미일 협력 모색
3.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조율
4.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선도적 추진

IV. 정책적 시사점

I. 문제 제기

-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6월2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한미일 3국협력의 원칙과 목표를 공식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영과 권위주의의 진영 간의 군사적·정치적 대결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파트너십을 과시
 -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우려와 점증하는 위협에 3국협력의 당면 목표를 집중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내 협력, 글로벌 이슈 공조 등 중장기적 협력 명분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
-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한 나토 정상회담에 한일 양국이 파트너 국가로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렸다는 사실은 3국 안보협력의 목표와 역할이 중국의 급부상과 세력화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을 예고
 - 이에 따라,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 결과는 한미일 협력의 범위는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고 협력의 대상은 가치와 규범, 글로벌 이슈, 경제안보, 대중 견제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
-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화, 한일관계 복원, 가치 및 규범 기반 외교 등도 한미일 협력의 정체성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G20 계기 3국 외교장관 회담(7/8)에서는 한미일 3국협력과 관련해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의 공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와 평화, △변영의 증진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
 - ※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국한하려는 입장을 보였으며 미일 양국도 이에 동의하여 3국 고위관계자 회동 후 공동 성명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발표한 바 있음¹⁾

1) White House, “United State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National Security Advisors’ Press Statemen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02/united-states-japan-republic-of-korea-trilateral-national-security-advisors-press-statement/> (accessed: July 20, 2022).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전략도발이 재개될 경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안보협력의 범위나 수준이 전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동맹 강화 추세,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 등에 수반하여 미일 양국은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적극적 태도 유지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정치적 민감성, 한일관계 악화 상태 장기화,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따른 대일경계 심리 등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3국협력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

- 윤석열 정부에서 예상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는 대북 억제능력 강화, 대중 견제 시도, 가치연대 추진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정책우선 순위와 기대이익에 공통점 뿐만 아니라 상이한 인식을 반영
 -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과 협력의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3자협력의 효용성을 증진하고 지역 내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3국의 공동인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협력의 진전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며, 인식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3국협력 과정에서 제기 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요구됨

II.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3국의 인식

1. 한미일 3국 인식의 공통점: 정상회담 평가

- 윤석열-바이든-기시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과거 정부에서 개최되었던 3국 정상회담에 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확보된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
 -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중재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일본 총리와의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 추진 논란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부재²⁾
 - 2017년 9월 유엔총회 계기 문재인-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대북 제재 강화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견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일 간 갈등요인이 부각³⁾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2+2 회의와 미일 2+2 회의를 통해 지역 차원의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탕 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발표된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5/28)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수준에서만 언급
 -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G20 계기 3국 외교장관 회담(7/8)에서는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의 공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와 평화, 번영의 증진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면서 3국 협력 영역의 확대를 예고

2) 강병철, “한일정상,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갈 길은 멀어” 연합뉴스 2014년 3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40326109000043?section=search> (검색일: 2022년 7월 16일).

3) 김병규, “日언론 “美日 정상, 韓에 대북인도지원 신중히 대응해달라 요청” 연합뉴스. 2017년 9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2041900073?section=search> (검색일: 2022년 7월 16일).

※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국한하려는 입장을 보였으며 미일 양국도 이에 동의하여 3국 고위관계자 회동 후 공동 성명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발표⁴⁾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간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도 합의
 - 3국 정상회담 이전부터 억제전략 강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기시다 정부, 그리고 외교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바이든 정부 사이의 정책적 교집합이 존재⁵⁾
 -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6/13)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과 탐지 추적훈련의 공개와 정례화에 합의하고 대일 고위급 국방정책 회의체 복원 계획도 공표
 - ※ 과거 미사일 경보훈련은 분기별 1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는 외부 비공개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등 3국 협력 심화 필요성’도 제기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견제에 공동보조 시행

2. 한미일 3국 인식의 차이점: 정책 우선순위와 기대이익

-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정상회담 발언을 통해 각국 지도자들이 중시하는 한미일 협력의 지향점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예고함으로써 정상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인식을 노출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에 따른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3국협력의 공통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을 강조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언급

4) White House, “United State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National Security Advisors’ Press Statemen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02/united-states-japan-republic-of-korea-trilateral-national-security-advisors-press-statement/> (accessed: July 20, 2022).

5) 성기영,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69호.(2022).

-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공동훈련 등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언급
-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에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한미 및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협력의 목표와 범위에 대해서는 상이한 표현을 사용

[표 1] 한미일 양자 정상회담 중 3국협력 관련 언급

정상회담 시기	한미일 협력 관련 표현
바이든-스가 미일정상회담(2021.4)	한미일 3국협력이 공통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
문재인-바이든 한미정상회담 (2021.5)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2022.1)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 한미일 안보협력의 포괄성 강조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 (2022.5)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2022.5)	북한문제에 대한 미일 공조, 안보적 결속 강조

*자료: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성을 강조한 데 비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문제는 물론 가치와 규범, 공동안보 등 협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시
 - 한미일 3국 사이에는 3국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 및 기대이익의 상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가. 한국의 정책 우선순위

- 북핵 능력 고도화로 인한 억제 능력 강화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 전술핵 타격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형 3축체계 완성, 한미 확장억제 능력 강화 등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억제 효과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 탐지, 추적훈련을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
-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가치연대 등 한국 외교의 지평 확대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정상회담(5/21)에서 한미일 3국협력의 목적으로 △북한의 도전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공동 안보와 번영의 수호 △공동의 가치 지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 등 4개항을 제시함으로써 북한문제 해법에 국한했었던 3국 협력의 영역을 대폭 확대
 - 나토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G20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정부는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 가치의 공유 등으로 설정
-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과의 동조성 제고
 -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우려가 존재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전략적 우선순위 격차가 부각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목표를 최우선시함으로써 한미-미일동맹의 탈동조화(decoupling) 극복 시도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태생적 차이와 정체성에 대한 3국의 인식차, 일본의 쿼드(QUAD) 참가 등을 감안하여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한국 측 기여를 확대하고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의 동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나.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동맹의 재구성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의 3자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하고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동맹전략을 재편

- 미국은 동맹네트워크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하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⁶⁾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의 하나로 한미일 협력의 확대를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도전 요인들은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⁷⁾
-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 블록의 형성
 - 아태지역에서 최장 기간 유지되고 있는 한미, 한일동맹은 미국이 대중 경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자산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 견제 중심의 대외전략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한국과 일본을 안보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 법의 지배, 인권 중시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강조⁸⁾
 -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해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 시기와 달리 급성장한 한일 양국의 경제력은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보완재로 작용
-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트럼프식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대북 억제와 외교를 병행하는 접근 원칙을 천명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부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4/2) 등을 통해 동맹국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4월말 대북정책 발표 이후에도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회의(5/13)를 통해 대북정책을 조율

6) 차두현, “한미일 안보협력 전망: 동력과 한계, 바람직한 접근방향,”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p.2.

7)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accessed: July 22, 2022).

8) Blinken, Antony J. and Lloyd J. Austin III, “America’s partnerships are ‘force multipliers in the world’” Washington Post, March 14,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3/14/americas-partnerships-are-force-multipliers-world/> (accessed: July 20, 2022).

- 한일관계 개선 촉진을 통해 3국 협력 활성화에 기여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 행정부와 의회 고위인사들은 주요 계기시마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동시에 강조⁹⁾
 - 그러나 미국은 한일 간 갈등 사안을 소극적으로 관망할 경우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적극성을 보일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여론을 자극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있음¹⁰⁾
 - 한일 간 역사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에서 안보 분야에서는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지만 역사 문제 등 기타 분야에서는 적극적 관여보다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조용한 외교’에 치중할 가능성
 - ※ 미국은 2015년 웬디 셔먼 국무차관의 ‘민족주의를 동원한 정권 지지도 활용’ 발언과 2021년 한미일 외교차관회담 이후 독도문제로 인한 공동 기자회견 무산 등을 통해 한일 양국 사이에 역사문제가 차지하는 민감성을 인식

다. 일본의 정책 우선순위

-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 확보
 - 냉전 시기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미일동맹 내 일본의 역할은 1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1997년 미일방위협력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거치며 ‘주변사태’를 포함하여 자위대의 후방 지원(rear support) 제공 등을 명시
 - 일본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보다 높은 위협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 및 경보 및 대피 시스템 발전에도 주력하고 있음¹¹⁾
 - 일본의 대북 억제력은 미일동맹 내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미일관계 중시 기조 속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등 3국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외교력을 집중

9) 이조은, “미 의회, 북핵 문제 넘어 미한일 공조 추진…“한일 정보공유 필수” Voice of America 2022년 7월 8일 <https://www.voakorea.com/a/6649686.html> (검색일: 2022년 8월 5일); 이조은, “출렛 국무부 특별보좌관, 주미 한국대사 면담 “미한일 협력 강화 논의” <https://www.voakorea.com/a/6649149.html> (검색일: 2022년 8월 5일).

10) Robble Grammar, “As Security Threats Mount, Japan and South Korea Begin (Carefully) Mending Fences,”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2/06/30/japan-south-korea-bilateral-relations-north-korea-china/> (accessed: July 20, 2022).

11)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북핵 대응태세 비교와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1호, pp.13-16.

- 대중견제를 위한 역내 협력 메커니즘 형성
 -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중국에 추월당한 이후 일본 내에서는 경제적 경각심이 고조되었고 센카쿠열도(釣魚島)와 희토류 분쟁 등을 거치면서 대중 위협인식 상승
 - ※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의 대중국 위협인식 정도는 북한을 넘어섰고 안보 협력 우선 대상 국가에서도 중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하락¹²⁾
 - 일본의 대중 위협인식 미국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미일동맹 강화의 조건으로 작용하며 한국을 편입시킴으로써 향후 중국의 공격적 행태에 대해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 구상

-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성과 제도화 추구
 - 미국과 일본은 2022년 1월 화상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포괄성을(‘strong trilateral relationship on security and more broadly’) 강조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 방일 계기 5월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의 범위에 대해 ‘안보적인 결속(security ties)을 포함하여’라는 대목을 포함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
 - 또한, 기시다 총리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며 ‘공동훈련’을 언급했으나 한국 정부는 시기상조론으로 대응¹³⁾

- ‘적 기지 공격능력’ 법제화 등 방위력 증강 계기로 활용
 - 바이든 행정부의 대일관계 중시 기조 속에서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를 발족하고 북한 미사일 문제 등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앞세워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전략문서 연내 개정 의지 표명

12) 김태효·박중현.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국제관계연구』 제25권 제2호, pp.163-165.

13) 정아란,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담 통해 3국 안보협력 오늘로써 복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006100001?section=search>.

- 일본 내에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요격 중심의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22년 기시다-바이든 정상 회담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검토’를 공식화¹⁴⁾
-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미일동맹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는 한미일 협력에도 외부 압력요인으로 작용

III.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 한미일 3국 간에는 북한의 핵개발 불용, 억제능력 강화, 외교적 방식에 의한 비핵화 추진 등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공감대가 존재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확장억제협의체(EDSCG) 재가동,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한국형 3축체계 복원 등 대북 억제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치의 시행과정에서 한미일 3국 간 의사소통 강화 필요
- 북한의 ‘핵 타격’ 위협 국면 속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3국의 효과적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대북 억제 능력 강화와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
 -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이미 싱가포르 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 강화를 위해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서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공동시행
 - 경보, 탐지, 추적 훈련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효율적 안보협력을 지향

14) 윤석정,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 분석 및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pp.4-7.

- 단, 7차 핵실험 등 북한 변수가 발발할 경우에도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관계 차원의 조치 →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 한국의 독자적 대북 압박 조치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접근
- 북핵 억제와 관여의 병행을 위해서는 김대중-클린턴-오부치 집권 당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운영했었던 TCOG(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형태의 고위급 협의체를 창설해 북핵문제 관련 한미일 간의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

2.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미일 협력 모색

-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상호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인태전략 내에서 한미일 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후속조치 예상
 -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협력의 연계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현단계에서는 연성안보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 바이든 행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서(2022/02)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안보이슈를 넘어 지역 개발, 기술과 공급망, 여성 리더십 제고 등으로 확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음¹⁵⁾
- 쿼드(QUAD)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해양안보, 코로나 백신, 신기술 분야에서는 한미일+ α 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
 -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쿼드의 성격에 대해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 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¹⁶⁾ 사안별 협력에서도 쿼드의 개방성과 한미일 협력간의 연계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5)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accessed: July 20, 2022).

16) Joe Biden, Narendra Modi, Scott Morrison and Yoshihide Suga, “Our four nations are committed to a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Washington Post, March 13,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3/13/biden-modi-morrison-suga-quad-nations-indo-pacific/>.

3.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조율

- 한일 양국은 대중 위협인식의 정도와 영역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식차 조율 노력 필요
 -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보복, 요소수 사태 등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 위협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센카쿠열도(釣魚島) 영유권 분쟁과 지전략적 경쟁, 민족주의 기반 대립 등에 기반한 일본의 상대적 위협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은 민감기술의 대중 유출 방지책 마련은 물론 가치관이 다른 나라에서는 기간 인프라 설비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등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큰 대중 위협인식을 보여주고 있음¹⁷⁾
- 대중인식과 대중정책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대중정책 차원에서만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할 경우 한일 양국은 딜레마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중국의 대한, 대일 경제보복 사태에 대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 메커니즘 창설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대중 위협인식을 조율해가는 것도 필요함¹⁸⁾
 - ※ 한일 양국은 각각 사드 문제와 희토류 분쟁 등에서 중국의 경제능력에 기반한 보복 조치를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4.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선도적 추진

-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 목적의 한미일 공조에 3국협력의 영역을 국한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의 목표와 운용에 경직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3국 협력의 다층적 측면을 강조
 - 코로나 대응과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 지역 내 재난 대응, 해상구조 활동, 빈곤국 개발지원, 아동교육 등 3국의 협력 영역을 다변화하고 협력의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고 향후 안보협력의 동력을 보강

17) 김규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21), p.7; 최진주, “일 기사다 내각 경제안보 설계자 ‘가치관 다른 나라에 인프라 의존은 위험’”, 『한국일보』 2022년 1월 5일 (검색일: 2022년 7월 22일).

18) Ichiro, Fujisaki, Han Sung Joo, James Steinberg “Cooperating, Competing, Confronting: US-Japan-Sou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as China rises, <https://www.thechicagocouncil.org/research/report/cooperating-competing-confronting-us-japan-south-korea-trilateral-cooperation-china> pp.7-10.(accessed: July 20, 2022).

-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제3국에 진출하여 공통의 이해에 기반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굴,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일본의 투자 인프라가 풍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미일 3국이 교육, 보건, ICT 등 분야에서 공동 개발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 경험 축적 가능¹⁹⁾
 - ※ 저소득 국가의 민간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미국의 국제개발 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도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제3국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인력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 내의 공공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확충

IV. 정책적 시사점

- 한미일 3국 사이에는 3각협력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공통인식과 함께 상이한 정책 우선순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기초 위에서 협력 모색
 - 단기적으로는 북한발 위협의 증대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확산에 따라 기존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협력의 요소들을 극대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통해 3국의 인식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
 - 한국 주도로 한미일 민관 전략대화 메커니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경제안보를 포함한 3각협력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19) Ichiro, Fujisaki, Han Sung Joo, and James Steinberg “Cooperating, Competing, Confronting: US–Japan–Sou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as China rises, pp.12–13. (accessed: July 20, 2022).

- 한미일 안보협력의 활성화가 3국 공통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기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국의 노력이 긴요함
 -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기반으로 하는 한일관계 개선이 한미일 협력 확대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따른 대일경계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일 양국과 협의
 -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협 억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약속(committment)과 투자 등을 통해 동맹 효과에 대한 확신을 한일 양국에 줄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한미일 협력 패턴을 지양하고 평시 3국간 건설적 관여를 통해 지역의 평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에 한미 양국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음

- 한미일 안보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의 동적 균형은 물론 산업 및 경제분야 협력도 긴요
 - 한미일 안보협력이 내포하고 있는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의 측면이 상호충돌하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국 간 민간 중층적 채널을 통해 협력의 목표와 범위에 대한 각국 내 인식차 축소 필요

- 한일 양국 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연대 차원의 공동의 경험이 일천한 만큼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진흥을 위한 공동의 이니셔티브 구상 노력 필요
 -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적 통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에서 강력한 아시아 파트너의 역할 수행
 - 아시아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외 원조 등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

참고문헌

- 강병철. “한일정상,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갈 길은 멀어.” 연합뉴스 2014년 3월 26일 <https://www.yna.co.kr/view/AKR20140326109000043?section=search> (검색일: 2022년 7월 16일).
- 김규판. 일본의 경제안보장전 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9832.
- 김병규. 日 언론 “美日 정상, 韓에 대북 인도지원 신중히 대응해달라 요청” 연합뉴스. 2017년 9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2041900073?section=search> (검색일: 2022년 7월 16일).
- 김태효 · 박중현.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국제관계연구』 제25권 제2호 (2020), pp.141-182.
- 박휘락. “한국과 일본의 북핵 대응태세 비교와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1호, (2019) pp.43-63.
- 성기영.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369호.(2022).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12, 호놀룰루) 공동성명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81 (검색일: 2022년 7월 19일).
- 윤석정.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 분석 및 함의.”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21).
- 이조은. “미 의회, 북핵 문제 넘어 미한일 공조 추진…“한일 정보공유 필수” Voice of America 2022년 7월 8일 <https://www.voakorea.com/a/6649686.html> (검색일: 2022년 8월 5일).
- 이조은. “출렛 국무부 특별보좌관, 주미 한국대사 면담 “미한일 협력 강화 논의”” <https://www.voakorea.com/a/6649149.html> (검색일: 2022년 8월 5일).
- 차두현. “한미일 안보협력 전망: 동력과 한계, 바람직한 접근방향.”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22).
- 최진주. “일 기사다 내각 경제안보 설계자 ‘가치관 다른 나라에 인프라 의존은 위험’”, 『한국일보』 2022년 1월 5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722120001863> (검색일: 2022년 7월 22일).

- Biden, Joe, Narendra Modi, Scott Morrison and Yoshihide Suga. “Our four nations are committed to a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Washington Post, March 13,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3/13/biden-modi-morrison-suga-quad-nations-indo-pacific/> (accessed: July 20, 2022).
- Blinken, Antony J. and Lloyd J. Austin III. “America’s partnerships are ‘force multipliers in the world’” Washington Post, March 14, 2021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3/14/americas-partnerships-are-force-multipliers-world/> (accessed: July 22, 2022).
- Fujisaki, Ichiro. Han Sung Joo, James Steinberg. “Cooperating, Competing, Confronting: US-Japan-South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as China rises, <https://www.thechicagocouncil.org/research/report/cooperating-competing-confronting-us-japan-south-korea-trilateral-cooperation-china> (accessed: July 20, 2022).
- Grammar, Robble. “As Security Threats Mount, Japan and South Korea Begin (Carefully) Mending Fences,”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2/06/30/japan-south-korea-bilateral-relations-north-korea-china/> (accessed: July 22, 2022).
-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2/U.S.-Indo-Pacific-Strategy.pdf> (accessed: July 20, 2022).
- White House. “United State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National Security Advisors’ Press Statemen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02/united-states-japan-republic-of-korea-trilateral-national-security-advisors-press-statement/> (accessed: July 20, 2022).

Abstract

Ki-Young, Su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trilateral summit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as held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Yoon Seok-yeol's attendance at the NATO summit, was held in the most favorable atmosphere compared to the trilateral summit of the previous governments. They agreed to expand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by openly carrying out trilateral military drill to respond to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Nevertheless, there are differences in perspectives and expected profits on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hereas South Korea sets its main goal for △ North Korea policy coordination △ value alliance △ Attempt to narrow the gap between South Korea-U.S. alliance and Japan-U.S. alliance, the United States values △reorganization of alliance within Indo-Pacific strategy △containment against China. And Japan's prioritizes △security assurance from North Korea's nuclear threat △containing China △reinforcing defense capacity. Therefore, in the short term, efforts should be made to maximize the elements of cooperation by focusing on the existing common perception as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China spread, while narrowing differences in perception through strategic communication in the medium-and-long term. To this end, the three countries need to first

Abstract

secure common awarenes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ake measures to deter the threat, while attempting to find out the field of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thin the Indo-Pacific strategy. Also, coordinating the threat perception against China and to expand the foundation of trus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pursuing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would be important tasks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Keywords: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Deterrenc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do-Pacific strategy

INSS

전략보고

September 2022. No. 17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